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지지: 일본, 대만, 한국의 비교*

강우진**

이 글의 목적은 아시아 바로미터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복지체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앞선 연구가 있었지만 소수의 연구만이 복지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더구나,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의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적었다.

이 연구의 경험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실재를 측정하는 변수인 민주주의 만족 결정요인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체제의 공정성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복지 체제의 공정성을 측정한 세 차원(소득 분배의 공정성, 분배적 정의, 세대 간 이동성)의 영향력의 양상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복지 체제의 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이 모두 민주주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세대 간의 이동성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만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분배적 정의가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복지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체제 원칙에 대한 선호(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정부)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

이 연구의 발견은 유의미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동아시아 국가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제에 대한 지지(현재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 결정 요인은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를 달성한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은 미디어에 대한 정당 간 평등한 접근성과 선거의 실제적 선택 제공 역할과 같은 선거의 실질적인 기능을 민주적 수행력 평가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체제의 수행력(실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주제어: 복지체제의 공정성, 소득분배 공정성, 사회적 이동성, 민주적지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기획 과제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 선호와 복지 국가> 보고서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익명의 저자 3분의 건설적이고 세심한 논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적 인 제약 등의 이유로 다 담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민주주의, 정당정치, 선거행위이다(nomadwj@gmail.com)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 체제(특히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민주적 지지(democratic supports)¹⁾와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민주적 지지는 민주주의 체제의 원칙과 규범에 대한 지지(이념)와 민주주의의 실제에 대한 지지(민주주의의 현재 작동방식에 대한 만족)이다. 이 두 차원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분석하는 앞선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대상이다(Norris, 1999; 2011).

이미 앞선 많은 연구들이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 결정 요인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러나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으로서 복지 체제의 공정성에 주목한 앞선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Kluegel and Mason, 2004; Erlingsson et al, 2014; Linde, 2012; Luhise, 2014; Magalhaes, 2016). 또한,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맥락에서, 단일 사례 기반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제에 대한 만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앞선 연구가 존재한다(Kang, 2015). 강우진(Kang, 2015)은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복지체제에 대한 만족이 민주주의의 실제 작동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교적 관점에서 이를 검토한 앞선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민주적 공고화 단계를 달성한 나라(일본, 한국, 대만)를 대상으로 앞선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민주적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관련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적 수행력 모델과 정치적 수행력 모델의 논쟁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수행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이다. 그렇다면 앞선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경제적 조건에 대한 인식 보다는 체제 차원의 수행력을 측정하는 복지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더 적절한 변수가 될 수

1) 민주적 지지(democratic supports)는 광범위한 지지(diffuse support)와 구체적 인지지(specific support)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Easton, 1975). 정치적 지지의 대상은 구체적인 지지로서 정치적 권위(political authority), 중간단계의 정치적 레짐(political regime), 가장 광범위한 지지의 대상으로 정치적 공동체(political community)가 있다. 정치적 권위는 정치인과 같은 정치적 행위자를 나타낸다. 정치 레짐은 정치적 권위구조와 그것의 원칙과 규범 등을 의미한다. 정치적 공동체는 좁은 의미에서 지역 공동체, 인종적 공동체로, 넓은 의미로는 크게 국가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민주적 지지의 다차원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노리스(Norris 1999; 2011)의 저작을 참고하라.

있다. 둘째,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다차원적이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소득분배의 공정성, 분배공정성, 세대 간 이동성으로 측정된 복지체제의 공정성이 분석 대상인 동아시아 3국에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또는 차별적으로 민주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것이다.²⁾ 셋째, 복지체제의 공정성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달성한 동아시아 3국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체제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민주주의 실재를 의미하는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규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민주적 지지와 연관된 아시아 퍼즐(Chu and Huang, 2010) 논쟁에 기여할 수 있다.

분석 사례로 선정한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인 세 국가(일본, 한국, 대만)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사례이다. 먼저, 세 국가는 상대적으로 균등한 부의 분배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룩했다. 이를 두고 세계은행(World Bank, 1997)은 ‘성장과 분배(growths with equity)’ 간의 결합이라 평가하고 축복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는 1990년대 중반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7-2008의 세계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분배와 관련된 복지문제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이 글이 경험 분석에서 사용하는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Survey, ABS)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동아시아 3국의 전체 응답자 3,757 명중에서 대부분인 87.58%가 소득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2가(66.24%)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둘째, 민주주의 대한 지지가 수요(demand)와 공급(supply)의 함수라고 할 때 다수의 여론조사로 살펴본 동아시아 시민들의 복지체제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실시된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6)가장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 동아시아 3국의 시민들은 전체응답자(4,034) 중 단지 10.91% 만이 높다고 답한 반면에 3분의 2가 넘는 69.9%가 낮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선호가 정책과 조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동아시아 3국은 분석대상으로 적절하다.

2) 이 글의 분석의 초점은 아니지만 이 글이 주목하는 동아시아 3국의 복지체제는 그동안 동아시아 모델(Esping-Andersen, 1990)로 분류되어왔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복지체제 모델 자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유교주의와 가족주의는 동아시아 3국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다(강우진 2019).

II. 이론적 분석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satisfaction with democracy)은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노리스(Norris 1999; 2011)는 정치적 지지의 개념을 확립한 이스턴(Easton, 1965; 1975)의 저작을 기반으로, 정치적 지지의 차원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첫째, 가장 광범위한 지지(diffuse support)로서 자신의 속한 정치 공동체, 또는 국가에 대한 지지로서 애국심이나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으로 나타난다. 둘째, 정치 체제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다. 이는 시민들이 민주적 가치와 이상(democratic values and ideals)을 수용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지를 통해서 측정된다. 셋째, 체제 수행력에 대한 평가로서, 정치체제의 수행력(performance of political regimes)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이 수준의 지지는 자신이 속한 민주주의의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을 묻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넷째,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로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같이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다섯째, 가장 구체적인 지지(specific support)로서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다. 이는 주로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공무원, 정당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앞선 연구는 국가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접근법은 절차적 수행력(procedural performance)과 정책적 수행력(policy performance)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종종 투입(input) 중심의 접근법으로 불리는 절차적 수행력 접근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차원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inde and Ekman, 2003).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선거 완전성(electoral integrity)이란 개념으로 확대시켰다(Norris 2014, 2019; Tyler and Trinkner, 2017). 선거 완전성은 선거과정의 규범(norms)과 국제 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고려할 때 절차적 수행력 접근법은 제3의 물결이나 그 이후에 민주화를 달성한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조차도 선거 과정에 흠결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2000년과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은 유색인종으로 대표되는 소수자 유권자에 대한 무무형의 제도적인 차별과 탄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국 일반투표(national popular vote)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결과 사이에 불일치와 같은 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Norris 2019).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시민들의 관심은 선거 경쟁의 질로 이동할 수 있다. 선거의 질(electoral quality)은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미디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거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 사이에서 실질적 선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정책적 수행력 접근법(흔히 결과 중심 접근법이라 부름)은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경제적 수행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Clarke et al, 1993; Armingeon and Guthmann, 2014; Quaranta and Martini, 2016). 분명히, 경제는 가장 가치적인 지표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인이다. 그러나 민주적지지 결정요인으로서 경제적 수행력 접근법을 논의할 때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앞선 연구들은 여론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경제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수행력을 측정했다. 그러나 경제 투표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적된 앞선 연구들은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투표 선택의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상당기간 누적되지 않는다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시민들의 (체제 수준의) 민주적 지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도출하기는 어렵다(Dalton, 2004; Kang 2015). 경제투표에 관한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책임의 명확성(clarity of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빌리면(Powell and Whitten, 1993), 시민들이 경제 침체에 대한 책임을 민주주의 체제에 돌리기전에 많은 단계가 선행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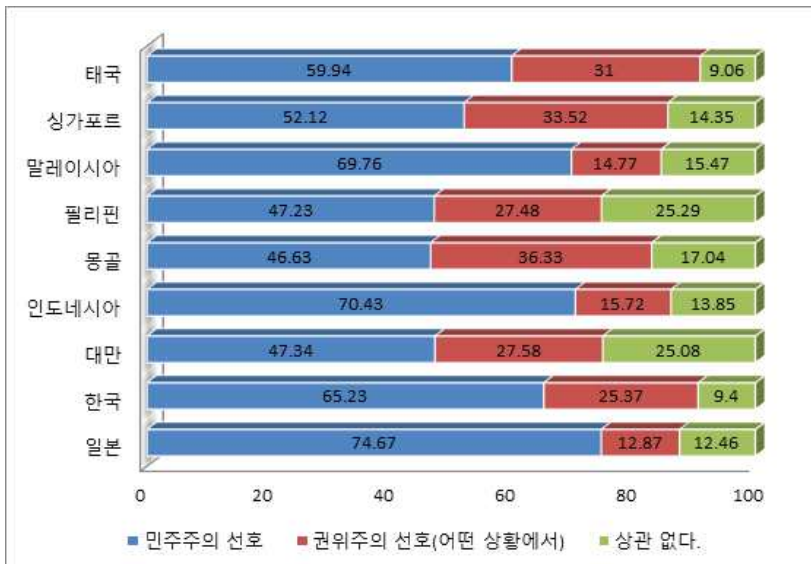
둘째, 최근 경제적 불평등이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Anderson and Singer, 2008; Anderson, 2012; Cordova and Layton, 2016). 그러나 불평등이 민주적 지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로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서 복지 체제의 공정성(fairness of welfare system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해도, 시민들이 복지 체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인식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체제 수준의 민주적 지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복지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강화될 수 있다.

공정성이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앞선 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몇몇 예외적인 연구(Linde and Erligsson, 2013)를 제외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적은 연구들은 대부분 젊은 민주주의 국가에 중점을 두었다(Kluegel and Mason, 2004; Linde, 2012; Seligson, 2002; Booth and Seligson, 2009). 시민들이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공정한 권력의 집행에 관심을 가질 때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할 것이다(Erlingsson, Linde and Ohrvall, 2014; Linde, 2012).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후 불평등의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 대한 지지와 관련된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민주적 절차 자체보다는 재분배의 결과에 달려있을 수 있다.

Ⅲ.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민주적지지

〈그림 1〉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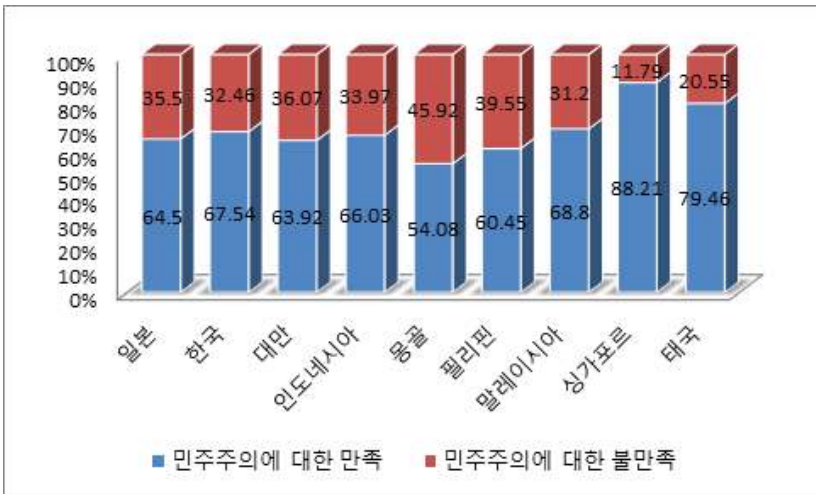


출처: ABS 4차 조사

참고: 항목은 백분율로 표시함

ABS 4차 자료 바탕으로 작성된 <그림 1>과 <그림 2>는 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민주적 지지의 두 수준(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실제)에 대한 지지의 국가 간 차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³⁾ <그림 1~2>이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9개국 중에서 일본, 한국, 대만은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liberal democracies)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은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선거 권위주의 국가(electoral authoritarianism)로 분류된다.

<그림 2>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출처: ABS 4차 조사.

참고: 항목은 백분율로 표시함. “만족”은 “매우 만족”과 “상당히 만족(fairly satisfied)”을 포함하였고, “불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못함”과 “만족하지 못함”을 포함하였다.

ABS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그림 1~2>을 통해서 민주적 지지와 관련하여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아시아 퍼즐(Asian Puzzle) (Chu and Huang, 2010)을 확인 할 수 있는가? <그림 1~2>의 분석 결과는 이를 확인한다. 먼저, 앞서 설명한 대로 <그림 1>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대

3) 이 글의 분석의 초점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역설(Asian Puzzle, Chu and Huang, 2010)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3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에 앞서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괄하여 민주주의적 지지의 패턴을 분석한다.

한 선호를 분석하고 있다. 이 차원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림 1>이 나타내는 양상은 이와 사뭇 다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지지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본 시민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가 74.67%(3/4 이상이 민주주의를 수용함)로 나타나 가장 높은 반면, 대만에서 그 비율은 47.3%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지지도는 일본과 대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3분의 2(65.3%)가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평균적으로 동아시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응답자의 2/3에 약간 못 미치는 62.41%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유보 없는 지지를 나타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지지 수준을 선거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지지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선호에 대한 평균은 54.76%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평균과 불과 7.65% 차이만을 보일 뿐이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시민들의 선호 수준(70.43%)이 한국과 대만에서 시민들이 나타낸 선호 보다 높았다. 선거 권위주의 국가들과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수준의 차이는 더욱 작다.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의 수준은 60.6%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지지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1.81% 차이).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선호도(69.76%)는 한국과 대만에서 시민들의 지지 수준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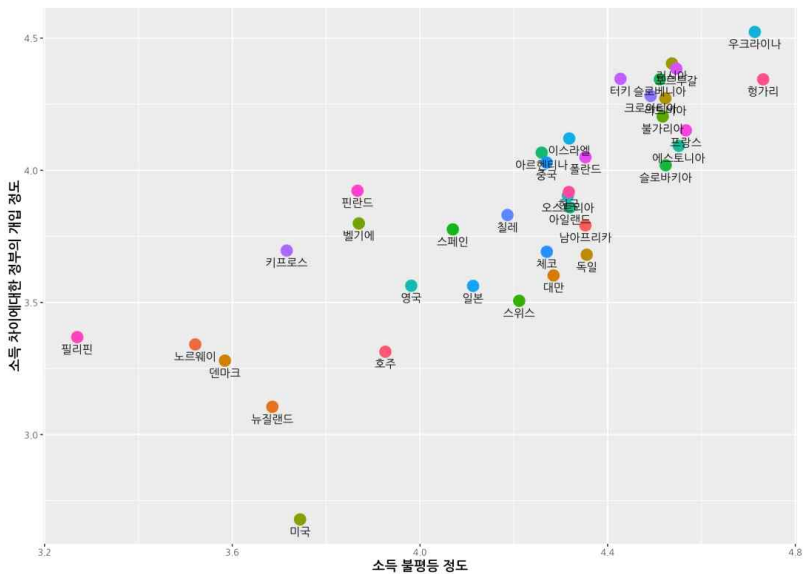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권위주의적 향수(authoritarian nostalgia)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의 수준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와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각각 26.51%와 26.43%로 나타나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흥미롭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적 향수의 수준이 선거 민주주의 국가나 선거 권위주의 국가의 수준보다 두드러지게 낮지 않았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권위주의적 향수의 평균은 21.94%로 나타났다. 일본이 12.87%로 가장 낮았고 대만은 27.58%에 달했다. 한국은 25.37%로 대만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자유 민주주의로 평가되는 동아시아 3국 시민 중 5분의 1 이상이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authoritarian nostalgia)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는 4명 중 1명이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만족의 수준은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약 3분의 2(65.32%)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을 나타냈고, 응답자의 3분의 1(34.68%)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은 한국이 가장 높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만족 수준의 차이는 미세하다. 반면,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응답자의 5분의 4(78.82%)는 그들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만족했으며 단지 응답자의 5분의 1(21.18%)만이 불만족을 나타냈다.

1. 체제 공정성의 중요성(Significance of System Fairness)

〈그림 3〉 소득 불평등과 정부의 역할



출처: ISSP 2009.

참고: 원 문항은 “○○은 다음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너무 크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왜 이 글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의 결정요인으로 복지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글은 앞선 연구에서 주로 다뤘던 경제적 수행력의 모델이 최근에 화두로 부상한 민주주의 체제의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수요와 공급의 함수라는 것이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심화와 함께 시장 중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전 세계의 지배적

인 패러다임이 되면서 공정성이 화두로 부상하게 되었다. 제3의 물결이후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가 시장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를 완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결과, 미국에서도 금권자본주의(plutocracy)와 새로운 계급사회 시대(New Gilded Age)의 도래를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되었다(Fraser, 2015; Freeland, 2012).

공정성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이외에도, 이들 국가에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한 경험 분석은 복지 체제의 공정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그림 3>은 국제사회조사(ISSP) 2009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소득 불평등 평가와 이러한 불평등을 다루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의 관계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변수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선형적 관계(linear relationship)가 존재한다. ISSP 2009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득 불평등이 너무 크다’는 점에 동의했다(87.48%). 또한 응답자의 3분의 2(66.24%)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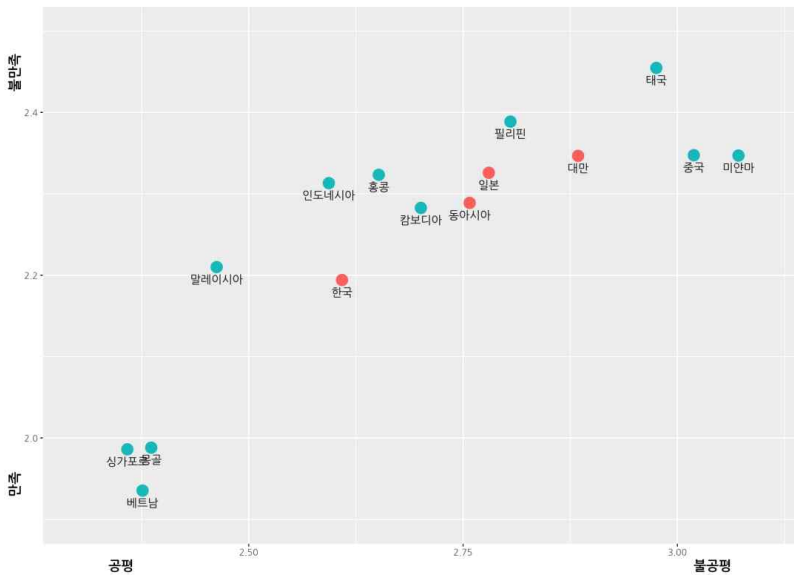
위의 논의가 나타내는 바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 체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ISSP 2009 자료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응답자(88.89%)가 ‘부유층이 저소득자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3분의 2이상(66.96%)의 응답자가 부유층이 지불하는 세금이 너무 적거나 낮다고 평가했다. 요약하면, ISSP 2009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이 복지 체제의 재분배 기능 차원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복지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평가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ISSP 가장 최근 조사인 2016 자료에 따르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9.9%). 반대로, 응답자의 3분의 2(66.91%)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높다고(“많이 높다” 또는 “상당히 많이 높다”) 평가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복지체제의 공정성과 민주적 지지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본격적인 통계분석에 앞서서 ABS 4차 자료를 이용하여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지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복지체제의 공정성은 소득분배의 공정성(fairness of the income distribution), 분배 공정성(distributional justice),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의 세 변수로 측정되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민주적 지지가 개인적 수준의 현상이라는 점에서 복지체제의 집합적 지출 보다는 복지체제의 정책적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과 평가가 영향변수로서 더 적절할 것이다. 소득 분배의 공정성이 복지체제를 통한 재분배 정책의 정책적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 분배 공정성은 응답자와 가족의 노력에 대비한 소득의 공정성을 측정한다. 이 변수는 시장에서 임금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받은 다양한 소득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세대 간 이동성은 시장에서 불평등이 보완되는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비록 재분배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체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않는더라도 세대 간 이동성은 복지체제의 공정성의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소득 분배의 공정성과 민주적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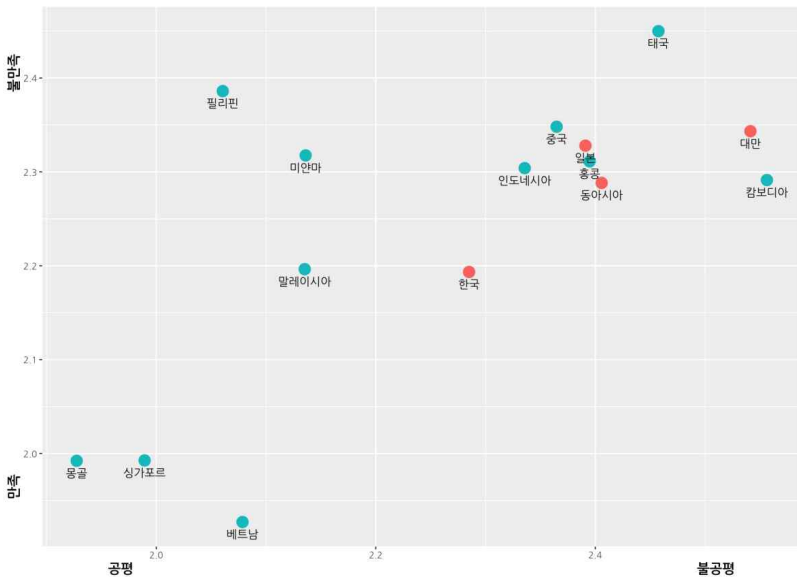


이 글은 시민들의 민주적지지 결정 요인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그림 4〉는 시민들의 소득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만족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만족과 선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변수의 관계에 있어서 두 집단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좌측하단의 세 나라(베트남, 싱가포르, 몽골)를 보자. 이 그룹에서는 더욱 많은 수의 시민들이 소득 재분배의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국가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반대로 오른쪽 상단에 3개국(태국, 중국, 미얀마)은 소득 재분배의 공정성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집단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은 두 집단 경계에 위치한다. 대만과 일본의 시민들은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민주주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지만 두 나라보다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림 5〉 분배적 공정성과 민주적 만족



출처: ABS 4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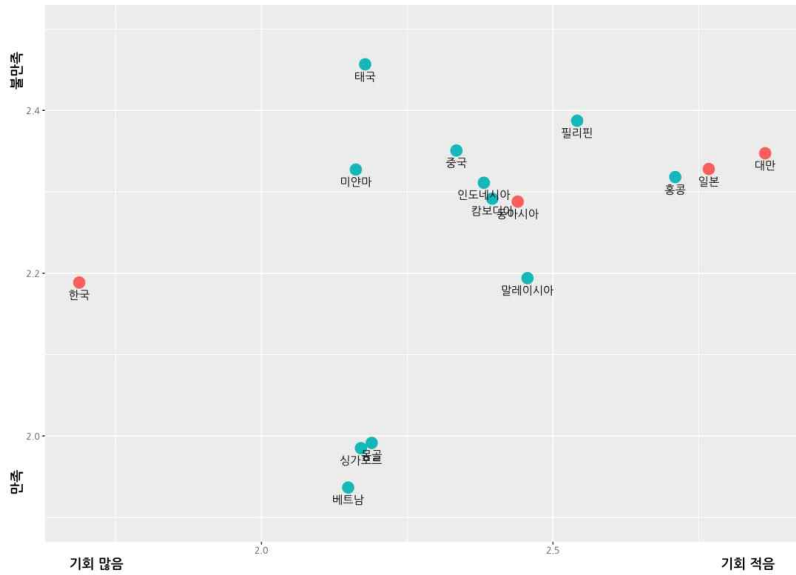
〈그림 5〉는 시민들의 분배 공정성⁴⁾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4〉와 비교할 때, 〈그림 5〉에서는 국가들의 분포는 분산되어 있고, 뚜렷한 선형적 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로 한정하면, 〈그림

4) 분배 공정성은 구성원들이 회사에 대한 기여에 비해서 자신들이 받는 보상의 총량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Folger and Konovsky, 1989).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지지: 일본, 대만, 한국의 비교 41

5)에서 <그림 4>와 유사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대만에서 두 변수 사이에 가장 뚜렷한 관계가 나타났다. 대만의 시민들은 분배 공정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주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한국은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가장 평균에 근접한 나라였다.

<그림 6> 세대 간의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그림 6>은 세대 간의 이동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6>은 두 가지 요소 사이에서 뚜렷한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IV. 연구 설계 Research Design

이 글이 경험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ABS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이다. 이 조사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속한 14개국에서 2014년부터 2016까지 기간에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을 감안하여 경험 분석은 일본, 한국, 대만 동아시아 3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종속변수

이 글에서 종속변수는 민주적 지지(democratic support)이다. 민주적 지지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와 민주주의 현재 작동방식에 대한 만족(satisfaction with democracy),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다음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치체제에 관한 다음의 문항 중 ○○님의 의견은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응답자가 “민주주의는 항상 다른 종류의 정부 보다 더 바람직하다”를 선택한 경우는 1을 부여했고, “어떤 경우에는 권위주의가 민주정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선택한 경우는 2를 부여했고,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체제가 민주적인지 비민주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3을 부여했다. 둘째, 민주주의 실제에 대한 만족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은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범주는 4점 척도로 1(매우 만족)에서 4(전혀 만족하지 않음)로 코딩되었다.

2. 독립변수

경제적 수행력 모델은 국가 경제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측정하는 세 가지 경제 평가 변수-회고적 평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적 평가-를 사용하였다. 회고적 평가 변수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5점 척도로 코딩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1(매우 좋음)~ 3(보통)~5(매우 나쁨)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5점 척도로 코딩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1(훨씬 좋음)~3(거의 같음)~5(더 나빠짐)로 구성되어 있다. 전망적 평가 변수는 “지금부터 몇 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를 묻는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1(훨씬 좋음)~3(거의 같음)~5(더 나빠짐)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 수행력 모델은 세 가지 변수(선거의 공정성, 미디어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선거에서 실질적 선택의 여부)에 기초하여 측정되었다.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수행력을 측정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변수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전체적으로, 지난 전국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의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4점 척도로 코딩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1(완전히 공정)에서 4(자유

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이 동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만으로는 정치적 수행력을 측정하기는 불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가지 추가적인 변수를 분석에 포함했다. 먼저 미디어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은 “우리나라에서 정치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대중 매체에 대해서 공평한 접근성을 가진다.”라는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실질적 선택(real choice)은 “우리의 선거가 다른 정당과 후보자들 사이에서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두 변수는 4점 척도로서 응답범주는 1(강하게 동의)에서 4(매우 동의하지 않음)로 측정되었다.

문화적 모델은 대인 신뢰(people's trustworthiness), 타인의 이타성(people's selfishness), 접촉 하는 사람 수(number of contacts) 등 세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대인 신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나요?”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로서 1점(강하게 동의)에서 4점(강하게 비동의)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타인의 이타성 변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응답지가 “이용하려 한다”는 1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는 2로 코딩되어 있었다. 이 글의 분석에서는 “항상 이용하려 한다.”에 응답한 사람은 1을 부여했고, 그 외는 0을 부여하여 가변수를 도출했다. 셋째,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보통 평일에 몇 명과 접촉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5점 척도로서, 0명~4명이라 응답한 사람은 1로 코딩되었고, 50명 이상이라 응답한 사람은 5로 코딩되었다.

아시아 가치 (Asian Values Model) 모델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 우선주의(familism), 자기 결정주의(self-determination), 권위에 대한 정향(orientation towards authority)등 이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민주주의나 권위주의나)에 대한 경험 분석 모델(표3)에서 권위에 대한 정향 변수에 주목한다(Dalton and Ong, 2005; Park and Shin, 2006; Welzel, 2011). 권위에 순응적인 정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권위주의 체제에 더 친화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에 대한 정향은 강력한 지도자 결정(strong leader's decisions), 일당독재(one-party), 전문가 결정(expert-decision) 등의 세 변수로 측정되었다. 먼저, 강력한 지도자 결정에 대한 선호는 “우리는 의회와 선거를 제거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문항에 근거를 두었다. 둘째, 일당 통치에 대한 선호는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선거와 공직을 맡아야 한다”는 문항에 근거를 두

었다. 셋째, 전문가 결정에 의한 통치의 선호는 “우리는 선거와 의회를 제거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문항에 근거를 두었다. 세 문항들은 모두 4점 척도로서 원 자료에서는 1점(매우 동의)에서 4점(매우 반대)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이 글의 분석에서는 4(매우 동의)에서 1(매우 반대)로 거꾸로 코딩하였다.

공정성 모델은 소득 분배의 공정성, 분배 공정성, 세대간 이동성, 세 변수를 통해서 측정했다. 소득 분배의 공정성은 “○○은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분배 공정성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과거에 한 모든 노력을 고려했을 때, 당신의 가족이 받는 소득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두 변수에 대한 응답 범주는 모두 4점 척도로서 1(매우 공정함)에서 4(매우 불공정함)로 코딩되었다. 세대 간의 이동성은 “부모님 세대와 비교할 때 ○○님의 세대는 삶의 기준이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를 묻는 문항에 근거하여 측정되었다. 변수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1(실질적으로 더 많은 기회)에서 4(실질적으로 적은 기회)로 코딩되었다.

3. 통제변수

위에서 제시된 영향 변수에 더하여, 다수의 통제변수들이 경험분석에 포함되었다. 첫째,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통제되었다.⁵⁾ 이 글의 종속 변수를 고려하면, 부패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 변수는 “정부는 부패와 뇌물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를 묻는 문항을 기반으로 하였다. 변수는 4점 척도로서 응답 범주는 1(최선을 다함)에서 4(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코딩되었다.

둘째,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통제하였다. 정치적 효능감은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과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의 두 가지 차원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내부적 효능감은 “때로는 정치와 정부가 너무 복잡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를 묻는 문항에 근거를 두었으며, 외부적 효능감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를 묻는 문항에 근거를 두었

5) 부패가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문헌은 이미 상당히 존재한다(Booth and Seligson, 2009; Seligson, 2002; Rothstein, 2009). 광범한 부패가 존재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부패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수행력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증가할 것이다.

다. 두 가지 문항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1(매우 동의)에서 4(매우 반대)로 코딩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령, 교육, 성별, 가구 소득,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와 같이 사회·경제적 차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도 경험 분석에서 통제되었다.

V. 분석결과

〈표 1〉 변수들의 기술 통계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	20,142	2.729	1.096	1	5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	20,063	2.924	0.977	1	5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적 평가	18,264	2.454	1.022	1	5
선거의 공정성	17,118	1.989	0.908	1	4
공정한 접근성	15,052	2.111	0.792	1	4
선거에서 실질적 선택	18,169	2.4	0.957	1	4
대인신뢰	18,487	2.345	0.719	1	4
타인의 이타성	20,667	0.362	0.48	0	1
접촉하는 사람의 수	20,366	2.446	1.209	1	5
일당지배에 대한 선호	17,429	2.066	0.913	1	4
강력한 리더에 대한 선호	17,513	2.093	0.903	1	4
전문가 결정에 대한 선호	17,378	2.093	0.853	1	4
소득분배 공정성	19,057	2.698	0.741	1	4
분배적 정의	19,422	2.271	0.602	1	4
세대 간의 이동성	19,965	2.261	0.963	1	5
정부의 부패근절 노력	17,839	2.161	0.793	1	4
내적 효능감	19,320	2.128	0.801	1	4
외적 효능감	19,331	2.211	0.849	1	4
사회적 지위	19,375	2.966	0.911	1	5
가구 소득	17,542	2.627	1.274	1	5
교육	20,604	5.485	2.59	1	10
연령	20,625	45.1	15.669	17	108
성별(여자)	20,667	0.512	0.499	0	1

출처: 아시아 바로미터 4차조사

〈표 2〉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만족에 대한 경험 분석(순서형 로짓 분석)

변수	Model 1 (동아시아)		Model 2 (일본)		Model 3 (한국)		Model 4 (대만)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	0.093(0.051)	1.097	0.140(0.113)	1.151	0.036(0.102)	1.037	0.098(0.073)	1.103
현재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	0.144(0.049)***	1.156	0.134(0.112)	1.143	0.240(0.097)**	1.272	0.115(0.059)	1.117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적 평가	0.183(0.046)***	1.200	0.140(0.105)	1.150	0.144(0.094)	1.155	0.237(0.064)***	1.268
선거의 공정성	0.363(0.055)***	1.438	0.303(0.129)**	1.354	0.395(0.094)***	1.485	0.385(0.083)***	1.469
공평한 접근성	0.246(0.056)***	1.279	0.363(0.111)***	1.438	0.030(0.088)	1.030	0.347(0.106)***	1.415
선거에서 실질적 선택	0.311(0.052)***	1.365	0.549(0.139)***	1.732	0.375(0.091)***	1.456	0.230(0.075)**	1.259
대인신뢰	0.341(0.072)	1.406	0.189(0.151)	1.205	0.309(0.114)**	1.362	0.402(0.124)**	1.496
타인 이타성	0.036(0.094)	1.036	0.338(0.217)	1.402	-0.062(0.143)	0.939	0.402(0.124)	0.958
접촉하는 사람의 수	-0.051(0.039)	0.949	0.007(0.079)	1.007	-0.074(0.082)	0.928	-0.105(0.056)	0.900
소득분배 공정성	0.486(0.069)***	1.627	0.459(0.153)**	1.582	0.637(0.117)	1.892	0.358(0.111)***	1.431
분배적 공정성	0.274(0.073)	1.316	0.349(0.153)**	1.417	0.135(0.124)	1.145	0.343(0.120)**	1.409
세대 간의 이동성	0.154(0.046)***	1.167	0.307(0.098)**	1.360	0.199(0.074)	1.143	-0.050(0.083)	0.950
정부의 부패 근절 노력	0.392(0.060)***	1.480	0.315(0.129)**	1.370	0.527(0.113)***	1.694	0.345(0.089)	1.412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지지: 일본, 대만, 한국의 비교 47

내적 효능감	-0.006(0.056)	0.993	-0.007(0.104)	0.992	0.070(0.089)	1.073	0.001(0.109)	1.001
외적 효능감	0.048(0.054)	1.049	0.018(0.096)	1.018	0.044(0.090)	1.045	0.123(0.100)	1.131
사회적 지위	-0.053(0.055)	0.947	-0.037(0.121)	0.963	-0.093(0.096)	0.911	-0.025(0.083)	0.975
가구 소득	0.063(0.035)	1.065	0.020(0.072)	0.021	-0.010(0.060)	0.989	-0.025(0.083)	1.075
교육	-0.025(0.026)	0.974	-0.027(0.058)	0.972	0.108(0.054)	1.114	-0.026(0.039)	0.973
연령	0.002(0.003)	1.002	-0.009(0.006)	0.990	-0.005(0.005)	0.994	0.021(0.005)***	1.022
성별 (여자)	0.054(0.079)	1.056	0.278(0.180)	1.321	0.187(0.135)	1.206	0.204(0.127)	0.815
일본	0.210(0.121)	1.233	-----	-----	-----	-----	-----	-----
대만	0.139(0.106)	1.149	-----	-----	-----	-----	-----	-----
Number of Obs	2,784					1,000		
Cragg-Uhler (Nagelkerke) R2	0.250		0.326			0.302		0.243

출처: 아시아 바로미터 4차조사

참고: *** $p \leq 0.001$; ** $p \leq 0.05$

〈표 3〉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한국, 일본, 대만)에서 시민들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

변수	Model 1 (동아시아)		Model 2 (일본)		Model 3 (한국)		Model 4 (대만)	
	계수(표준오차)	한계계수	계수(표준오차)	한계계수	계수(표준오차)	한계계수	계수(표준오차)	한계계수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	-0.024(0.054)	0.03	0.415(0.185)	0.047	-0.234(0.120)+	0.14	0.072(0.069)	0.068
현재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	-0.131(0.061)	0.07	-0.510(0.185)**	0.16	0.150(0.127)	0.126	-0.193(0.084)**	0.117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적 평가	0.089(0.057)	0.063	0.089(0.166)	0.024	-0.203(0.122)	0.105	0.182(0.075)**	0.129
선거의 공정성	0.141(0.066)**	0.065	0.140(0.203)	0.088	0.270(0.116)**	0.107	0.098(0.097)	0.41
공평한 접근성	0.012(0.069)	0.025	-0.027(0.171)	0.012	0.026(0.108)	0.027	-0.091(0.122)	0.078
선거에서 실질적 선택	0.186(0.063)**	0.076	-0.106(0.215)	0.026	0.340(0.114)**	0.136	0.079(0.089)	0.034
대인신뢰	0.032(0.089)	0.042	0.475(0.228)**	0.106	0.132(0.142)	0.076	-0.112(0.146)	0.12
타인 이타성	0.164(0.116)	0.02	-0.572(0.369)	0.034	0.063(0.178)	0.054	0.516(0.192)**	0.076
접촉하는 사람의 수	0.017(0.048)	0.009	0.164(0.120)	0.051	-0.077(0.103)	0.008	0.005(0.065)	0.01
강한 리더에 대한 선호	0.531(0.084)***	0.234	0.769(0.215)***	0.241	0.559(0.133)***	0.266	0.370(0.146)**	0.169
일당 통치에 대한 선호	0.042(0.091)	0.105	-0.287(0.239)	0.108	0.178(0.134)	0.115	0.045(0.169)	0.148
전문가 결정에 대한 선호	0.347(0.083)***	0.183	0.358(0.206)+	0.159	0.348(0.132)**	0.15	0.361(0.145)**	0.187
소득 분배공정성	0.053(0.084)	0.045	0.788(0.240)***	0.211	-0.069(0.141)	0.026	0.021(0.129)	0.036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지지: 일본, 대만, 한국의 비교 49

분배 공정성	-0.161(0.091)+	0.078	-0.353(0.240)	0.069	-0.214(0.153)	0.094	-0.051(0.142)	0.095
세대 간의 이동성	-0.149(0.059)**	0.071	0.283(0.150)+	0.082	0.048(0.141)	0.256	0.086(0.097)	0.048
정부의 부패 근절 노력	-0.223(0.075)**	0.086	-0.158(0.201)	0.034	0.408(0.141)	0.029	-0.310(0.108)**	0.136
내적 효능감	0.054(0.070)	0.022	0.046(0.169)	0.015	0.078(0.111)	0.029	-0.188(0.126)	0.115
외적 효능감	-0.148(0.067)	0.056	0.150(0.155)	0.032	-0.128(0.109)	0.055	-0.287(0.117)**	0.11
사회적 지위	0.035(0.068)	0.022	0.016(0.192)	0.026	0.179(0.121)	0.087	-0.047(0.101)	0.032
가구소득	-0.003(0.043)	0.011	-0.022(0.117)	0.029	-0.010(0.075)	0.052	0.042(0.065)	0.071
교육	-0.021(0.032)	0.216	-0.191(0.092)**	0.183	-0.157(0.066)	0.258	0.074(0.046)	0.259
연령	-0.014(0.003)***	0.187	-0.020(0.010)**	0.146	-0.008(0.007)	0.099	-0.014(0.006)**	0.2
성별(여자)	-0.067(0.097)	0.019	-0.094(0.284)	0.037	-0.324(0.167)+	0.039	0.027(0.146)	0.014
일본	-0.662(0.166)	0.083	-----	-----	-----	-----	-----	-----
대만	0.161(0.126)	0.062	-----	-----	-----	-----	-----	-----
Constant	-1.012(0.671)	-----	-2.942(1.760)		-0.261(1.187)			
Number of Obs	2,726		599		975		1,152	
Cragg-Uhler (Nagelkerke) R2	0.265		0.341		0.307		0.244	

출처: 아시아 바로미터 4차조사; 참고: ***p<0.001;**p<0.05;+p.0.10; 기준선은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표 1〉은 이 글이 경험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앞서 밝힌 대로 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로 부상한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본격적인 경험분석에 앞서서 주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모델을 측정한 세 가지 변수 중 회고적인 평가 변수와 현재 경제 조건에 대한 평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0.516)를 제외하고는 높은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이 글이 주목한 공정성 모델을 측정하는 세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0.1657(소득 분배 공정성과 세대 간 이동성)~0.3455(소득분배의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로서 그다지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2〉는 민주주의 실제 수준의 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순서 로짓(ordered logit)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은 민주주의 체제의 원칙 수준의 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대로 원 자료는 '민주주의가 항상 바람직 하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권위주의 정부가 바람직하다' '체제가 비민주적이든 민주적이든 상관없음' 세 가지 응답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분석의 기초(baseline)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이다. 〈표3〉의 결과는 이 글의 초점 상 민주주의의 선호 대 권위주의의 체제 선호 결합사이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이론적 모델은 앞선 논의에 기반을 두어 경제 수행력 모델, 정치적 수행력 모델, 문화적 모델, 공정성 모델, 네 가지 모델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표 2〉에서 제시된 민주주의의 만족 결정 요인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자.

첫째, 경제적 수행력 모델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세 가지 변수-회고적 평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 전망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수행력 모델의 세 가지 변수는 네 모델(통합모델, 일본, 한국, 대만)을 관통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는 네 모델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가경제의 현재 조건에 대한 평가는 통합모델(모델 1)과 한국(모델 3)에서만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델 3)에서는 응답자가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실제에 대해서 불만족을 나타낼 확률이 높았다. 한국에서 현재 조건이 중요했던 반면에 대만(모델 4)에서는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만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만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ABS 4차 조사가 실시된 2014년에 대만에서는 해바라기 학생 운동이 발생했다.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양안 서

비스 무역협정 (Cross-Straight Service Trade Agreement)에 항의하기 위해 입법원과 행정원을 점령했다. 대만경제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정치권의 처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해바라기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남아있는 문제는 현재 경제 조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집권당에 대한 상벌을 넘어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 글은 앞선 연구에서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선거의 공정성 차원뿐만 아니라 선거의 역할 차원에서도 정치적 수행력을 측정했다. 동아시아 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여전히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자들은 동아시아 3국의 민주주의가 두 번의 정권 교체 테스트(two turnover test, Huntington 1991)와 같은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기준을 통과하였다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선거의 질은 완벽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련의 연구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넘어서 선거 완전성(electoral integrity)의 개념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Norris 2014). 민주적 만족의 결정요인으로서 선거 완전성의 영향은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리스(Norris 2019)의 설득력 있는 연구는, 미국의 민주적 만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 변수 중에서 자본의 역할, 여성의 평등한 기회, 선거의 공정성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글의 경험적 분석 결과 또한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세 국가 모두에서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에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전국단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낼 확률이 높았다.

선거의 공정성의 역할에 더하여, 선거 수행력의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검토하였다. 미디어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의 공평한 접근성과 선거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real choice)을 보장하는지 여부이다. 선거가 각 정당의 후보자 사이에 진정한 선택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네 가지 모델에서 일관되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미디어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은 통합모델(모델1)과 일본과 대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우 집권당의 장기 집권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론 자유에 관한 불만이 지속되었다. 경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일본, 한국, 대만 모두 혼합형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 효과에 있어서 다수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거가 다양한 정치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적 모델은 모델을 측정할 세 가지 변수 중에서는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 변수만이 통합모델(모델1), 한국(모델 2), 대만(모델 4)에서 민주주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인신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한국과 대만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현재 작동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영향력의 방향성이 한국과 대만과 동일하지만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넷째, 이 연구는 복지체제 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소득 분배 공정성, 분배적 정의, 계층 이동-이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전반적으로 공정성 모델은 민주주의의 실제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복지체제 공정성의 세차원이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 통합모델(모델 1)과 일본(모델 2)에서는 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 모두 민주적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모델 3)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세대 간 이동성이 민주주의 만족에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재분배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또한 세대간 이동성의 현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대만(모델 4)에서 소득 분배 공정성과 분배적 정의의 변수가 시민들의 불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였다.

여러 통제 변수 가운데 정부의 부패와 뇌물 근절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네 모델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세 국가 모두에서 정부가 부패와 뇌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더욱 많은 불만을 가졌다. 민주주의 발전에 비해서 동아시아의 부패 개선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¹⁾ 이 결과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에서 제시된 체제원칙 수준의 민주적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자. 위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일본, 한국, 대만)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 수준이 선거 민주주의 국가나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 수준보다 낮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이미 공고화되었다고 평가되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에서 시민이 여전히 권위주의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 3>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3국에서 나타난 시민들이 권위주의 정부 선호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1) 2015년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국 168개국 중에서 43위에 그쳤다. OECD 34개국 중에서는 28위에 머물렀다. 대만의 순위는 31위였으며 일본은 18위를 기록했다(<https://www.transparency.org/cpi2015>).

결과를 살펴보자.

첫째, 경제적 수행력을 측정한 세 변수 중 네 가지 모델(모델1~모델4)에서 일관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없었다. 현재 국가경제 조건에 대한 인식 변수는 3국의 통합모델(모델1), 일본(모델2), 대만(모델4)에서 중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영향력의 방향이다. 모델1, 모델2, 모델 4에서 현재 국가경제 조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할수록 권위주의 체제 보다는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대만(모델 4)에서는 현재 국가 경제에 대한 조건 변수와 국가 경제의 전망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상충되는 결과는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체제 수준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조건 변수의 적절성을 고민하게 한다.

둘째, 정치적 수행력 모델에서는 선거 공정성 평가와 실질적 선택 변수만이 동아시아 통합모델(모델 1)과 한국(모델 3)에서만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선호와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했다. 한국의 시민들이 지난 전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할수록 또한 실질적인 선택을 제공하는 선거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민주주의 체제 보다는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이 분석 결과는 추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경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해석될 수 있다. 권위주의 정부의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선거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경로분석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권위에 대한 정향 모델에서 강력한 지도자 결정 변수와 전문가 의사 결정 변수는 네 모델에서 모두 시민들의 권위주의 선호 결정요인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동아시아의 세 국가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s)를 통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은 군사화된 제국주의를 경험했으며, 한국과 대만은 급속한 산업화 시대에 권위주의 통치를 경험했다. 강한 국가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 나라에서 아시아 가치의 중요한 특징인 권위에 대한 수용은 권위주의적 노스텔지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였다.

넷째, 공정성 모델을 측정한 세 변수 중에서 네 모델을 관통하는 일관된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나마 소득분배 공정성과 세대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본(모델 2) 시민들의 권위주의적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VI. 결론과 함의

이 글의 목적은 시민들의 복지체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앞선 연구가 있었지만 소수의 연구만이 복지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를 연결하려고 시도하였다. 더구나,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복지체제 공정성의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적었다.

이 연구의 경험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실재를 측정하는 변수인 민주주의 만족 결정요인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체제의 공정성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복지 체제의 공정성을 측정한 세 차원(소득 분배의 공정성, 분배적 정의, 세대 간 이동성)이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에서 민주주의 실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일본에서는 복지 체제의 공정성을 측정한 세 변수 모두가 민주주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지만, 한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세대 간 이동성 변수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만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분배적 정의 변수가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복지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체제 원칙에 대한 선호(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정부)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

이 연구의 발견은 유의미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동아시아 국가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재에 대한 지지(현재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 결정 요인은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를 달성한 동아시아 3국에서 시민들은 미디어에 대한 정당 간 평등한 접근성과 선거의 실제적 선택 제공 역할과 같은 선거의 실질적인 기능을 민주적 수행력 평가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체제의 수행력(실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 연구가 확인한 것은 체제 수행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정치적 수행력과 경제적 수행력 사이의 대립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발견은 경제 상황만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경제적 수행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누적된 경기침체는 민주주의 효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경제적인 상황은 묻는 전형적인 설문조사는 그것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가 보여주었듯이,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복지 체제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우진. 2019.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 시민들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아시아 가치와 제도 신뢰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 리뷰》, 9(1): 317-340.
- Alesina, Alberto, & George-Marios Angeletos. 2005. “Fairne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5(4): 960-980.
- Anderson, Christopher J., & Christine Guillory. 1997.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66-81.
- Anderson, Christopher J., & Matthew M. Singer. 2008. “The Sensitive Left and the Impervious Right: Multilevel Models and the Politics of Inequality, Ideology, and Legitimacy i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4-5), 564-599.
- Armingeon, Klaus & Kai Guthmann. 2014. “Democracy in crisis? The declining support for national democracy in European countries, 2007-2011.”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3(3): 423-442.
- Booth, John A., & Mitchell A. Seligson. 2009. *The Legitimacy Puzzle in Latin America: Political Support and Democracy in Eight N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órdova, Abby, & Matthew L. Layton. 2016). “When is “Delivering the Goods” Not Good Enough?: How Economic Disparities in Latin American Neighborhoods Shape Citizen Trust in Local Government.” *World Politics* 68(1): 74-110.
- Dalton, Russell. 2004. *Democratic Challenges, Democratic Choices: The Erosion of Political Suppor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 Nhu-Ngoc T. Ong. 2005. “Authority Orientations and Democratic Attitudes: A Test of the ‘Asian Values’ Hypothesi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 : 211-232.
-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 _____.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 435-457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rlingsson Gissur Ó, Jonas Linde, & Richard Öhrvall. 2014. "Not so fair after all? Perceptions of procedural fairnes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the nordic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7(2): 106-119.
- Folger, Robert, & Mary A. Konovsky. 1989. "Effects of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on reactions to pay raise decis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115.
- Kang, WooJin. 2015. "Inequality, the welfare system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6(5): 493-509.
- Kluegel, James R., & David Mason. 2004. "Fairness matters: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legitimacy in post-communist Europe." *Europe Asia Studies*, 56(6): 813-834
- Linde, Jonas. 2012. "Why feed the hand that bites you? Perceptions of procedural fairness and system support in post-communist democra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1(3): 410-434.
- Linde, Jonas, & Gissur Ó Erlingsson. 2013. "The Eroding Effect of Corruption on System Support in Sweden." *Governance*, 26(4): 585-603.
- Lühiste, Kadri. 2014. "Social Protection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Multi-level Analysis." *Political Studies*, 62: 784-803.
- Magalhães, Pedro C. 2016. "Economic Evaluations, Procedural Fairnes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9(3): 522-534.
- Norris, Pippa (ed.)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2011. *Democratic Deficit: Critical Citizens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4. *Why Electoral Integrity Matt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9. "Do public perceptions of electoral malpractice undermine democratic satisfaction? The U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40(1): 5-22.

- Park, Chong Min, & Doh Chull Shin. 2006. "Do Asian Values Deter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Asian Survey*, 46(3): 341-361.
- Quaranta, Mario, & Sergio Martini. 2016. "Does the economy really matter for satisfaction with democracy? Longitudinal and cross-country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Electoral Studies*, 42: 164-174.
- Rothstein, Bo O., & Jan AN Teorell. 2008.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A Theory of Impartial Government Institutions".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21:165-190.
- Rothstein, Bo O. 2009. "Creating Political Legitimacy: Electoral Democracy Versus Quality of Govern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9(3): 311-330.
- Seligson, Mitchell A. 2002. "The Impact of Corruption on Regime Legitimacy: A Comparative Study of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Journal of Politics*, 64: 408-433.
- Tyler, Tom R., & Rick Trinkner. 2017. *Why Children Follow Rules: Legal soc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erceived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s and Democratic Support in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Comparing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WooJin K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on their democratic support.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democratic support, but only a few studies have made an effort to associate citizen's assessment of the welfare system and support for the democratic system. Also, there has been scant scholarly interest in the effects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welfare system in East Asian democracies (Japan, Korea, and Taiwan) relative to democratic suppor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terestingly, the three dimensions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income distribution, distributional justic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differed in patterns of influence in the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In Japan, all three dimensions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exercised significant influence. In Korea, however, only income re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exerted influence. In Taiwan, income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al justic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However, citizens' overall assessment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reference for the principle ideology of the system (democracy or authoritarian govern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a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xplanatory factors for citize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re multi-dimensional. Additionally, citizen's evaluation of welfare system are strong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evaluation of regime performance; and that is, how democracy works.

※ Keywords: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s, Fairness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Democratic Support, Satisfaction with Democracy